

【서평】

## 일본 원자력신화와 원전소송

: 그 역사와 현재를 둘러싼 해방의 기초

1. 다카기 진자부로 저, 김원식 역,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 서울: 녹색평론사, 2011.
2. 海渡雄一, 『(岩波新書 1337) 原発訴訟』, 東京: 岩波書店, 2011.

김은혜 (서울대 일본연구소)

### I. 최근 원전 재가동 중지 판결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고, 그동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과 진실 규명, 그리고 수습대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사능과 오염수는 여전히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발전소 54기의 전면 중지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초로 후쿠이현(福井縣) 지방법원에서 원전 가동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력사업자인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현 내에 있는 오이(大飯)원전 3·4

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원자력을 둘러싼 안전·경제·환경 신화를 부정하고,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감각을 중시하려는 사법부의 통절한 회개와 반성의 의미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이 판결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 규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원전 재가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재 일본에서 유사소송 약 18건이 전국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지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향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되기 때문이다.<sup>1)</sup>

이처럼 최근 제기된 원전 재가동과 중지 판결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 다음 두 권의 저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신화의 위험성을 알렸던 시민과학자 다카기 진자부로(高木仁三郎, 1939~2000)의 저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원자력발전소 소송(이하 원전소송)을 담당했던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1955~) 변호사의 저서이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사고가 난 직후, 다카기 선생 등과 원자력에 대한 연구회에 참여하던 가이도 변호사가 원전소송을 담당하는 등 두 사람은 사제지간과 같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저서를 통해서 소수의 과학자, 전문가, 법률가,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연대하면서 전개되었던 일본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제제기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大飯原發・差し止め訴訟 國民の命を守る判決だ,” 『東京新聞』(온라인), 2014년 5월 22일;

(<http://www.tokyo-np.co.jp/article/column/editorial/CK2014052202000148.html>).

## II.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먼저 과학자 다카기는 일본 핵과학자·과학평론가로서 도쿄대 이학부 화학과를 졸업 후 1961년 일본원자력사업 종합연구소 핵화학연구실에서 근무했다. 1965년에는 도쿄대학 원자핵연구소 조수로 활동했고, 1969년부터 도쿄도립대학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결국 1973년에 퇴직하고야 만다. 그는 1974년 플루토늄 문제를 생각하는 자주그룹 ‘플루토늄연구회’를 조직하면서 반(反)원자력발전소 운동을 지도해 나갔다. 대장암 투병 중에도 1997년 대안 과학을 위한 ‘시민과학자’ 육성을 목표로 ‘다카기 학교’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과 집필 활동을 계속해 갔다.

이러한 그의 지속적인 열정과 헌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대안적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1997년 수상하게 되었다. 그가 2000년 10월 서거한 이후, 그의 활동은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으로 확대되면서 차세대의 ‘시민과학자’를 목표로 개인과 그룹을 장려해서 육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대표 저서들과 활동들은 잡지 『녹색평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특히 그는 1975년 9월 ‘(일본)원자력자료정보실(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을 창설해서 시민을 위한 과학과 대안 모색에 힘써 왔으며, 이는 현재 한국에 있는 ‘녹색전환연구소’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유언적 저서이기도 한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은 2000년 8월 1일자로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는 2002년에 번역되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 예언적 성격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핵의 시대였던 20세기 마지막인 1999년 9월 30일 발생한 ‘도카이무라(東海村) JCO임계사고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본 정

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안전신화의 붕괴’를 언급한 것을 보고, 이것이 시대를 가르는 중대한 변화라 생각한 것이 암투병 중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한다(다카기 진자부로, 2011:15, 이하 쪽수만 표기).

여기서 말하는 JCO임계사고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茨城縣 東海村)에 소재하는 스미토모(住友) 금속광산 자회사이자 핵연료 가공시설인 ‘JCO우라늄 가공공장’에서 발생했다. 임계사고(criticality accident)란 핵분열성 물질이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제어불능인 상태로 임계량(또는 임계의 크기)을 넘어서는 임계초과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사고로 수많은 현장 작업자와 주민들이 피폭 당하게 되었다. 사고 중심부에서 반경 350m 내의 주민 모두가 피난했으며, 10km 내 31만 명이 강제로 ‘자택 대기’를 하는 등 공포감은 확산되었다. 사고 3개월 후 현장 작업자 오오우치 히사시(大内久, 35세) 씨가 사망했고, 7개월 후 시노하라 마사토(篠原理人, 39세) 씨마저 사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원자력의 역사를 총괄하면서 원자력발전의 본질과 문제점을 제기한 뒤, 일본사회에 만연한 원자력신화를 ‘일본을 멸망시키는 아홉가지 주술(일본어판 부제이기도 하다)’로 구분해서 매우 상세하게 논증해가고 있다.

1) 무한한 에너지원 신화: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원자력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들해졌다. 그러나 1953년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이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군사적 목적과 기술적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상업이용을 포함한 광범한 핵 기술의 주변영역을 개발하는 일종의 기술전략, ‘핵 기술 입국’적 전략이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60쪽). 즉, 장밋빛 과학기술 미래론과 정치적 의도가 결부됨으로써 엄청나게 큰 신화로 확대된 것이다.

2) 석유위기 극복 신화: 일본의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 노동쟁의’가 상징하듯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면서, 일본은 고도성장시대(1955~1973년 사이)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석유 또한 위기를 겪으며 석유만능주의가 붕괴되면서 원자력을 전력의 주류처럼 내세우는 정책들이 세워졌다(72~73쪽). 미쓰비시(三菱), 도시바(東芝), 히타치(日立) 3사가 매년 회사의 원자력부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부가 원자력 산업 촉에 발주를 하는 형태로 그 정책들이 진행되었다(82쪽).

3) 평화이용 신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 발효 이후 미·영·중·불·소 5개국 외의 나라들은 오히려 ‘원자력 연구’나 ‘상업이용’을 내세웠다. 그 결과, 실제로는 비교적 소규모로 원자력개발을 했던 나라들이 핵무기 보유국들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이어지게 되었다(92쪽). 일본의 원자력 계획에서 생산하는 플루토늄은 플루토늄 239, 241의 농도가 60~70% 정도로 ‘원자로급 플루토늄’이며, 이것은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그는 단호히 주장한다(94쪽).

4) 안전 신화: 197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WASH-1400 보고서(일명 ‘라스무센 보고서(Rasmussen)’라고 함)는 원자로에 거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양키스타디움에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1979년 ‘루이스(Lewis) 보고서’는 라스무센 보고서가 제출한 절대적 확률 부분을 집중 비판하면서 신화를 상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100~101쪽). 실제로 1957년 영국의 윈즈케일(Windscale) 사고, 1979년 미국의 TMI사고(레벨 5),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레벨 7)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벌어졌던 1995년의 몬주(もんじゅ) 나트륨 누설 사고(레벨 1), 1997년 도카이(東海) 재처리공장 사고(레벨 3), 1999년 JCO 임계 사고(레벨 4),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레벨 7)처럼, 실제로는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대사고가 발생해왔던 점을 밝히고 있다(105쪽).

5) 값싼 에너지 공급 신화: 원자력은 거대한 설비투자과 기술개발, 방

사능의 견고한 방호가 필수적인 에너지이다. 특히, ‘핵확산’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초반 상업자본은 산업화를 꺼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일종의 국가적 전략과 보호에 의해서 가까스로 산업화되었던 것이다(119~120쪽). 1976년부터 자원에너지청에서는 계속해서 값싼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용 추정치는 폐기물의 최종처분비용 등 방재나 배상체계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135쪽).

6) 지역발전 신화: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며, 멀리 떨어진 거대한 소비지역으로 송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136쪽). 따라서 이러한 기피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원3법(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세법,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 정비법)과 교부금 제도가 제정된 것이다. 1995년 문주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1996년 1월 23일 원전이 집중된 3개현(후쿠시마·니이가타·후쿠이)의 지사들이 “금후 원자력정책 실행에 관한 제언”을 요청하기도 했다(140쪽). 흔히 거론되는 것처럼 초반에는 ‘고정자산세’라는 엄청난 수입이 유입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고정자산세는 대략 6년 후가 되면 반감되고야 마는 현실적인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147쪽).

7) 청정에너지 신화: 1980년대 말부터 문제가 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원전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선전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산업과 일본정부, 그리고 통산산업성이 적극적으로 이 신화를 지원해 나갔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부하(負荷), 즉 소비 측의 전력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력 조정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전력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증대하는 사회로 갈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으로 에너지 과다소비형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산화탄

소 발생량은 증대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156쪽).

8) 핵연료 리사이클 신화: 이 신화는 앞서 지적했던 1)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신화를 또 다르게 각색한 셈이다. 핵연료 리사이클, 즉 플루서멀(Plu-thermal)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우라늄과 혼합한 'MOX연료(Mixed OXide fuel)'로 만들어 열중성자(thermal) 원자로에서 태우는 것이다. 일본도 독일·프랑스·미국·스웨덴 등처럼 일부 연구개발용 플루토늄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MOX연료로 가공하여 경수로에 사용하는 핵연료 리사이클을 계획했었다.<sup>2)</sup>

즉, 일본도 고속의 중성자를 가지고 연료의 플루토늄을 증식해서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일본 국산 발전용 몬주(もんじゅ) 고속증식 원형로를 계획했던 것이다. 몬주는 1991년 5월 완성된 후 1994년 4월 첫 임계를 달성했으며, 1992년 8월부터 송진을 개시하게 되었다. 전기 출력은 28만kw, 2050년경부터는 상업화 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95년 12월 나트륨 누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결국 운전을 정지하고 말았다.<sup>3)</sup>

9) 일본의 기술우수성 신화: 정치적 판단에서 시작된 일본의 원자력 개발은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국제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원자로가 다른 나라들의 원자로보다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 독자의 기술 시도들인 원자력 선(船) 무쓰(むつ) 계획, 신형전환로(ATR) 계획 중 후겐(ふげん,

2) 현재 일본은 MOX 사용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해상운송하고 있으며, 록카쇼무라(六ヶ所村)의 MOX생산 공장사업도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3) 몬주는 후쿠이현(福井縣)의 쓰루가(敦賀) 반도 북단부에 있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고속증식로로서, 이 명칭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의 '문수(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2010년 5월에 성능 시험을 재개했으나, 같은 해 8월 '노내 중계 장치(爐内中継装置, 노심 연료 교체 시 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장치)'의 낙하사고로 인해서 다시 운전이 정지되었다. 2013년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운전준비 중지명령이 나오게 되었다.

보현보살의 보현(普賢)에서 유래), 그리고 문주 등까지 대단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89쪽).

마지막으로 저자는 “원자력 문제의 현재와 미래”에서 1) 원자로의 노후화 증후군, 2)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 증후군, 3) 폐로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4) 방사성 폐기물과 잉여 플루토늄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사고들 거의 대부분이 ‘내부고발’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점은 이 사고의 원인 규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려워지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205쪽). 원래 위험한 원자력을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원자력 신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저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닫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로 이 책을 마치고 있다.

### Ⅲ. 원전 소송이란 무엇인가?

저자인 가이도는 1981년 변호사 등록 이후, 주민단체에게서 최초로 소송을 의뢰받은 것은 1984년이라 한다. 30여 년 이상 원전 소송을 직접 담당해 왔으며, 일본변호사협회 사무총장(2010~2012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감옥과 인권』(1995·2004), 『공모죄란 무엇인가』(공저, 2006), 『헌법의 위기를 넘어서』(2007), 『형무소개혁: 형무소시스템재구축에의 지침』(공편, 2007)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몬주소송”(2006), “원자력문제와 환경”(2007),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소송”(2010) 등이 있다.

그는 1976년 대학 3학년 당시 ‘도쿄대 재판문제 연구회’라는 학생 동아리에서 공해에 반대하는 주민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부터 원



자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일본 사법사상 최초로 원고 승리 결과가 나왔던 ‘몬주 공소심’과 최근 활단층(活斷層)<sup>4)</sup>에 위치한 위험성으로 이슈가 된 ‘하마오카(濱岡) 원자력 발전소 소송’ 등 줄곧 원전 소송을 담당해 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는 탈원전소송을 담당하는 ‘탈원발변호단전국연락회’에서 가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원전 소송’은 크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소송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운전을 멈추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다. 이는 “원자로 등 규제법 23조에 기초한 원자로의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력회사 등 설치자에 대한 주민의 인격권에 근거한 민사소송이 있다.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작업원의 노동재해 인정 신청 사건이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피해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원전 소송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제1장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묻는다”에서는 행정소송의 구조로서 1973년 제소 이후 1992년 10월 29일 이카타(伊方) 최고재판소 판결(기각)까지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소송이 가진 의의를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진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한 재판관들의 태도변화를 논의하면서, 대표적으로 ‘몬주’ 소송과 시가(志賀)원자력발전소 2호를 통해서 가나자와(金澤) 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海渡雄一, 2011, 이하 쪽수만 표기).

“제2장 원자력 발전은 대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에서는 하마오카(濱岡)

4) 활단층(active fault)이란 최근까지 활동하면서 가까운 장래에도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소 소송을 다루면서 시즈오카(靜岡) 지방 법원 판결까지 이르는 경위를 설명한다. 일본 국토 내의 지진·활단층의 분포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입지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서 a) 홋카이도 도마리(北海道 泊) 원자력발전소, b) 아오모리현 오오마(靑森縣 大間) 원자력발전소, c) 도호쿠(東北) 태평양 연안, d) 후쿠이 쓰루가만(福井 敦賀灣) 일대, e) 시마네(島根) 원자력발전소, f) 야마구치 가미노세키(山口 上關)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 중), g) 에히메 이카타(愛媛 伊方) 원자력발전소, h) 사가 겐카이(佐賀 玄海) 원자력발전소, l) 가고시마 센다이(鹿兒島 川内) 원자력발전소를 들고 있다.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대표 사례인 아오모리현(靑森縣) 동부 시모키타(下北)반도 룝카쇼무라(六ヶ所村)는 본래 벼농사·축산과 채소 등 근교농업과 연어·오징어 등 연안어업이 주산업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무쓰오가와(むつ小川) 개발계획’에 따라 세계 최대의 콤비나트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후 이 지역에는 국가석유비축기지·핵연료 사이클 시설·우라늄 농축공장뿐만 아니라, 야마세(ヤマセ, 북동풍·계절풍)를 이용한 풍력발전 등과 같은 설비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모해갔다.

“제3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도쿄전력”에서는 저자가 담당했던 도쿄전력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인 a) 재순환 펌프 손상 사고, b) 플루서멀을 둘러싼 싸움, c) 도쿄전력에 의한 문제점 은폐와 형사 고발을 다룬다(119쪽).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쓰나미(津波, 지진해일)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진정 ‘상정 외(想定外)’라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151쪽). 여기서 그는 다카기 선생의 “핵시설과 비상사태: 지진대책의 검증”을 중심으로(1995년, 『일본물리학회지』, Vol. 50, No. 10)라는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고였음을 비판한다(160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른바 ‘재판 외 분쟁 해결 수속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sup>5)</sup>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정부에 요청해서 설치되게 된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도 소개하고 있다(178쪽).

“제4장 피폭당한 노동자와 주민들”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노동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a)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작업원들의 피해가 노동재해로 인정된 사례, b) 고려되지 못했던 내부 피폭의 문제, c) 노동재해로 인정된다 해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데 8년 10개월 간 피폭선량의 총량 50.63mSv는 연간 최대치라 해도 9.8mSv였다. 즉, 법령에서 정해진 방사선업무 종사자의 연간 피폭량 한도 50mSv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이다(186).

그런데 이 당시 원자력 압력 용기 저층부의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작업했던 작업원들의 피폭은 매우 심각했다. 결국 시마하시 노부유키(嶋橋伸之, 당시 29세) 씨는 1989년 1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뒤, 1991년 11월 사망하게 되었다. 실명을 공개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노동재해 신청이었기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본사회에 몰고 왔던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187쪽). 마지막으로 이 책은 방사능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탈(脫)원자력발전소를 위한 법적 과제-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최후로 하기 위해서”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사법부가 어떻게 원자

5) ADR이란 조정·중재·알선 등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재판소에 의한 민사조정이나 변호사회, 업계 단체에 의한 해결책의 제안 등 재판 외의 분쟁 처리, 즉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통칭해서 이르는 용어이다.

력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사실들을 묵과하고 은폐하는 것에 일조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 영역의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탈원자력 사회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극히 ‘일상생활의 실천 영역’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은 원전소송을 규정한 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과연 대지진에 견딜 수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일본 국토 내에 위치한 지진·활단층(活斷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들을 비교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도쿄전력이 가진 체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된 노동자와 주민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피해보상보험의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 확립 방안을 제시한다. 즉, 탈(脫)원자력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로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일본 사법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행정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일본에서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종류”와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과 원전소송”이라는 칼럼을 소개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표적인 원전 소송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내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구조나,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노동재해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IV. 해방적 파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사회 내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제도의 책임’은 매우 막중한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3년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일상생활의 감수성’은 엄청나게 증폭된 반면, ‘원자력발전 속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무뎠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후쿠시마라는 파국 이후 위험이 관리되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 상황에 다시금 직면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학자 울리히 벡(Beck, U.)은 고도의 복합 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에서 상처 받기 쉬운 약한 집단들한테 많은 위험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후쿠시마 사고는 역설적으로 자기성찰을 요구하는 이른바 희망을 주는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에 대한 공포만을 증폭시키는 종말적 파국으로 귀결하고야 말 것인가? 또한, 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나 시스템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sup>6)</sup>

‘포스트 3·11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원자력 관련 에세이와 정책 제언 서적들을 조금하듯 소비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두 권의 저서에 주목한 것은 단지 사회적·법률적 의미에서 ‘저항의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

---

6) “약자들에게 집중된 위험…시민이 개입해 변화시켜야,” 『한겨레신문』 (온라인), 2014년 5월 16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24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241.html)).

려 원자력을 둘러싼 아홉 가지 신화를 지적했던 시민과학자 다카기와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소송에 평생 헌신해 온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의 활동은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가진 역사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화화된 과학적 합리성’을 다시금 ‘사회적 합리성’으로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원자력 신화와 이에 대항하는 원전소송을 둘러싼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비단 ‘과학과 사법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안적인 과학과 원전소송 그 자체가 원자력 신화의 피해자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과 이의제기 수단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자 여전히 증설이 계획 중인 동아시아 권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저서들은 원자력 신화에서부터 해방의 기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Kim, Eun Hye) .....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2013년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도쿄 메트로폴리스: 시민사회·격차·에스닉 커뮤니티』(공저), 『에너지 혁명과 일본인의 생활세계: 고도성장기의 경험』(공저 근간), “아시아 개발주의 원(原) 풍경: 수풍담 이미지”, “도쿄 도시 레짐과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역사” 등이 있다.